

디지털화폐 시대 ‘눈앞’… 금융약자 위해 최소 지위 보장해야

디지털 결제 시대

현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민간에서 편의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현금 활용을 줄여가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정책적 차원으로 현금 사용을 줄이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화폐’의 도입도 검토되면서 ‘현금없는 사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고령자나 미성년자, 일부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현금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 한국서도 ‘디지털화폐’ 도입 임박

한국은행은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실증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의 2차 테스트를 위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1차 테스트에서 예금토코에 기반한 결제 시스템을 점검했다면, 이번 2차 테스트는 다양한 업종에서의 송금·결제·자동 입출금 등 예금토코의 상용화를 위한 검증을 진행한다. 2차 테스트에는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을 비롯한 9개 은행이 참여한다.

‘CBDC’는 복제가 어렵고 추적이 용이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다. 민간에서 기존 통화 가치와 연동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 기술적으로 유사하다. 중앙은행이 각 은행에 CBDC를 공급하면 각 은행은 이를 매개로 예금토코를 발행하며, 소비자는 해당 예금 토코를 통해 화폐를 전산화 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에서도 디지털화폐의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말로 예정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예정에 맞춰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통화 가치와 연동돼 발행되지만, 송금이나



한 시민이 휴대전화의 간편결제 앱을 활용해 신분당선을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7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 총재는 이달 초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프로젝트 한강’의 운용 성과를 발표했다. /뉴시스

환전 시 발생하는 비용이 낮고, 기존 통화 대비 제약도 적다.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거래에서 비용 경쟁력을 앞세워 기존 화폐를 대체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해외에서도 ‘현금없는 사회’로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은, CBDC 2차 실증 마무리 수준
9개 은행 예금토코 상용화 검증
소득 대비 현금 지출 8.4%로 급감
카드·간편결제 중심 전환 가속

스웨덴에서는 과반수의 은행 점포들이 현금을 취급하지 않으며, 중국의 도시지역에서는 송금이나 대금 지급의 대부분을 ‘알리페이’나 ‘위챗’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진행한다. 프랑스나 스페인과 같은 유럽연합(EU) 소속국 일부는 고객 결제 시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운영 중이다.

◆입지 좁아지는 현금

국내에서 현금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2025년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의 월평균 활용 현금금은 32만4000원에 불과했으며, 같은 기간 소득 대비 현금 지출은 8.4%에 그쳤다. 10년 전의 29.6%와 비교해 21.2%포인트(p)나 급감했다. 국민 대다수가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카드·간편결제 등 비현금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것.

현금 활용이 줄어드는 것은 결제 및 유통 편의성 때문이다. 소비자는 휴대의 번거로움이나 분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업체 측에서도 유통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미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4개 광역시에서는 ‘현금 없는 버스’가 보편화됐고,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의 키오스크는 현금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다. 대형 은행 점포에서도 사용처가 보관 비용이 큰 ‘동전’을 제한적으로만 수용한다.

현금의 입지는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도 각종 정책을 통해 ‘현금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하고 있어서다. 카드나 간편결제 등 ‘비현금지급수단’은 결제 이력이 남아 만큼 탈세 가능성이 낮으며, 사용처가 확인되는 만큼 통제를 벗어나는 화폐 유통성도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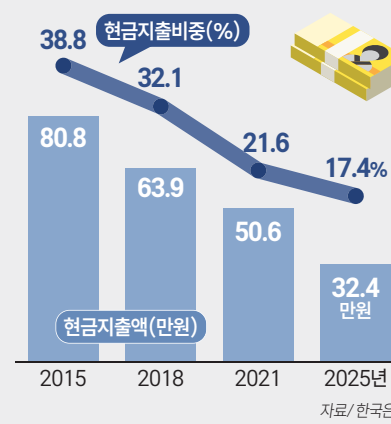
성인 45.8% 전면 전환에 반대
59.1%는 사용 보장 필요성 공감
고령층·미성년자 접근 대책 시급
전산망 마비 대비 대체수단 필요

◆ 현금, 최소한의 입지 보장돼야

우리 사회가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금에 최소한의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나 간편결제, 디지털 화폐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이 존재하며,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비상 상황에서의 사용도 고려해야 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의 45.8%는 ‘현금없는 사회’를 반대했다. 현금없는 사회를 찬성하는 응답은 17.7%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39.1%는 금융약자가 거래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고, 22.2%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인 월평균 현금지출 규모



경제활동이 곤란해지는 것을 염두했다. 특히 현금 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59.1%로, 2022년의 49.6%보다 9.5%p 늘었다.

현금없는 사회로 이행 중인 해외 주요국에서도 현금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은행의 현금 취급률이 낮은 스웨덴에서는 최근 일정 수준의 현금 보유와 ATM기기 유지를 의무화했고, 미국에서도 일부 주가 소매 매장의 현금 결제 거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한국에서도 디지털기기 사용에 어려움

을 겪는 고령자, 현금이나 체크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성년자, 신용점수 하락이나 압류 등을 이유로 신용결제 수단의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은 비현금지급수단의 활용이 제한적인 만큼,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

금융권에서는 우리 사회가 현금 없는 사회로 완전히 전환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현금 사용률이 하락하는 도시 지역과 달리 고령자 비중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현금 사용률이 높고, 카드를 제외한 비현금지급수단의 결제 인프라도 입도 더더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금없는 결제 환경이 주류가 되면서 간편결제사들이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경쟁적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다만 기존 단말기를 무료로 개선하거나 신규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형태인 만큼, 결제 인프라가 미비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프라 설치가 더딘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들은 현금 보유 및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환수 동전 폐기… 10원·50원 입지 축소

≫ 1면 ‘현금 없는 사회…’서 계속

소비 생활에서도 현금의 입지는 좁아졌다. 주요 프랜차이즈들은 결제 시 카드·페이앱 중심의 현금 사용이 불가한 키오스크를 우선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현금 사용이 아예 불가하다.

우리 사회에서 현금이 빠르게 퇴출되는 것은 경제성 때문이다. 현금은 사용자의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발행·유통·회수 등 전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아울러 카드나 페이앱 활용 시에는 결제 이력이 명확하게 남는 만큼, 미신고 결제 등 세금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진다. 정부가 정

책적으로 현금 사용을 줄여나가는 이

유다. 특히 휴대가 불편하고 발행 및 유통 비용도 높은 동전의 입지는 더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굴곡압착 소각’ 방식의 주화 폐기에 돌입했다. 더는 유통되지 않고 한으로 환수되는 동전이 늘어나면서, 대량 보관 중인 동전을 더는 활용할 수 없도록 변형 및 폐기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물가가 오르면서 동전의 역할은 ‘잔돈’으로 제한된 만큼, 사실상 퇴출된 1원 및 5원 동전처럼 10원 동전과 50원 동전도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모바일 카드 58종으로 확대… 터치·QR 결제 경쟁 본격화

실물 미제시 이용 규모 7.3% 증가
간편지급서비스는 51.9% 급증
잠금 해제만으로 단말기 인식 가능

카드 소비의 중심이 실물에서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다. 카드사들이 모바일 카드 발급을 확대하고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고도화하면서다. 동시에 쿼알(QR) 결제 시장까지 확대되면 소비자들의 실물카드 의존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카드는 ‘실물 없는 모바일 카드’ 발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3종의 신용카드 상품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총 58종의 상품에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계산 후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있다. /뉴시스

모바일 카드는 별도의 플라스틱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다. 기본 연

회비는 없으며 카드 발급부터 신청, 이용까지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서비스 확대는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카드 이용이 확산하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모바일 간편결제에 대세로 자리 잡은 금융 트렌드에 맞춰 고객 선택권을 넓히고 연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바일 전용 라인업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실물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결제 트렌드는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실물카드 미제시 카드 이용 규모는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반면, 실물카드 이용 규모는 0.4% 감소했다. 특

히 카드 간편지급서비스 이용 규모는 같은 기간 51.9% 늘어나며 실물카드 미제시 이용 증가를 견인했다.

일평균 이용액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 실물카드 미제시 일평균 이용액은 2022년 1조3300억원에서 지난해 1조6680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실물카드 제시 이용액은 같은 기간 1조4160억원에서 1조405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자연스레 모바일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KB국민카드는 ‘KB페이 탭앤페이’ 서비스를 선보였다. 앱을 실행하거나 결제 메뉴에 진입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잠금화면을 해제한 뒤 단말기에 터치하면 결제가 가능하다.

현대카드도 지난 5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앱 실행 없이 잠금화면만 해제하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결제 절차를 간소화했다.

QR 결제 시장까지 확대되면 소비자들의 실물카드 의존도는 한층 더 낮아질 전망이다.

실제비싸카드, NH농협카드, 우리카드 등은 주요 카드사들은 해외 QR 결제 시장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QR 결제 네트워크 확산을 통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결제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metro